

---

**12월 3-4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2015.12.17.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 차례

### 1. 정부행정 (정미나) | 1

국정원 강화 위해 대테러방지법 밀어붙이나 ... 콘트롤 타워 전면 재검토 해야

### 2. 과학기술 (고광용) | 4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 7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의 배경과 파장

### 4. 정치 (박철한) | 1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5. 여론동향 (심은정) | 14

I 해외 - 미국 여론동향

II 국내 - 엇갈리는 안철수 지지도, 호남서도 간보나...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mailto:0225jsk@hanmail.net)
-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mailto: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mailto:gaea123@naver.com)

# 1. 정부행정

## ○ 국정원 강화 위해 대테러방지법 밀어붙이나 ... 컨트롤 타워 전면 재검토 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음. 정부 여당과 국정원 역시 테러방지법을 핵심 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음.
- 현재, 테러방지 법안과 관련해 발의된 안은 새누리당 이병석, 송영근, 이노근 의원 등의 법안임. 여기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안은 이병석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논쟁의 핵심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따른 권력남용 우려임. 보다 구체적으로 본 안은 ▲ 정부는 5년 마다 국가대테러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둬, ▲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등을 적시하고 있음.
- 이에 새정련 김광진 의원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입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 핵심 논리는 대테러 대응을 규율하는 기존 대통령 훈령 ‘국가대테러활동 지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훈령으로서 1982년에 제정되었음. 이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2015년 1월 2차례나 개정됐음.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대상은 아니나, 동법 46조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관한 개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의 임기동안 기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나 개혁 의지는커녕,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음. 즉,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두 차례나 개정하면서도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세부적인 사항만 개정하는 등, 우리나라 테러 대응에 있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적이 없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부정하고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의 기존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
- 하지만, 테러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를 행정규칙인 대통령 훈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법으로서 내부 준칙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됨. 결국, 대통령 훈령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됨.
- 따라서, 대테러대응에 관한 규율은 대통령 훈령이 아닌 입법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새정련 김광진 의원의 주장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향후 대테러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 당의 입장 및 대응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대테러대응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함. 그러나, 새정련 김광진 의원의 주장과 같이 기존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대테러 대응을 하는 것은, 대테러 대응에 관한 국가의 역

할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더욱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대테러대응은 대통령 훈령이 아닌 입법사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핵심 쟁점으로 다뤄야 할 것은 대테러대응의 컨트롤 타워의 문제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안대로 될 경우 국정원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문가들은 NSC를 지목하고 있음. NSC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테러에 대한 문제 역시 국가안보의 문제로 확장해서 다룰 경우 NSC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안보개념을 국가 간 전쟁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Homeland Security 라는 안보개념으로 확장하고 테러를 국가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함.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국가안보를 북한의 위협 등 전쟁에 초점을 둠으로써 테러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위협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대테러방지법은 확장된 안보개념에 기반을 두고 테러를 국가안보의 수준으로 다뤄야 함. 이를 위해 NSC가 테러까지 포괄하여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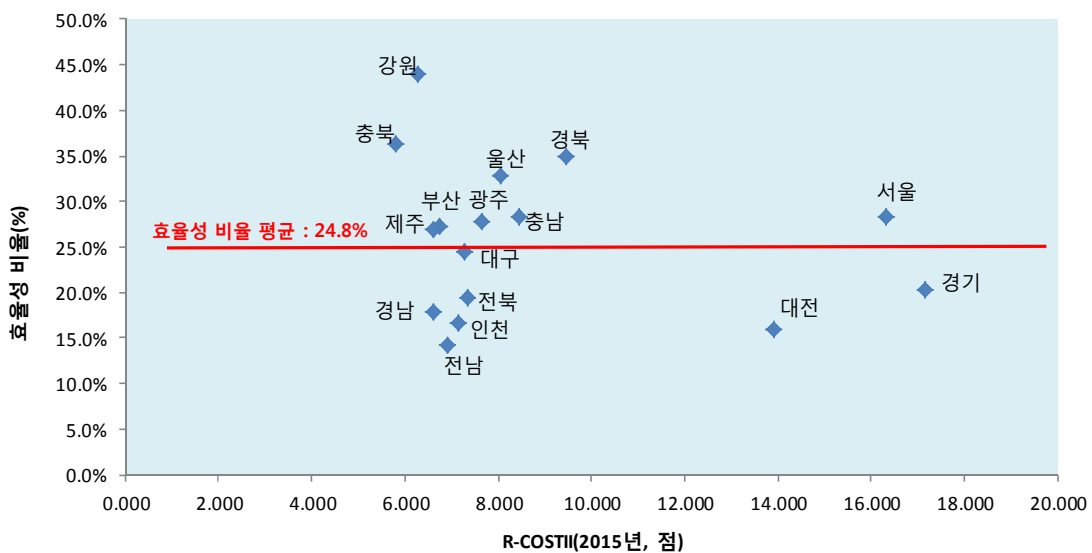
## 2. 과학기술

### ○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발표... 지역격차와 자원·환경 의존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남. 수도·대전권은 자원대비 성과 낮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2월 10일(목)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2015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함.
- 16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평가 결과,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서울과 대전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대체로,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자원(연구인력 및 조직 및 지식)과 환경(각종 지원제도, 인프라, 교육/문화 등)이 좋은 경기도와 서울,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의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 부문 역량은 서울, 경기, 대전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는데, 이는 자원의 의존성이 대단히 큼을 보여줌.

<그림> 효율성 비율과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에 따른 지역 분포('15년)



출처 : KISTEP 보도자료 2015. 12. 8. (화).

- 서울, 경기, 대전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14점 이상인데, 기타 지역은 6점~10점에 밀집되어 있어, 수도·대전과 타 지역 간 과학기술혁신역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적으로 서울, 대전, 경기 지역 외 지역과학기술역량은 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 별 차이가 없음. 동시에, 울산, 광주, 인천, 부산 등 비교적 인구와 재정 여력이 크게 나쁘지 않은 광역시급 단위의 혁신역량이 7점에 머물러 있음.

▶ 지역과학기술혁신 효율성은 자원·환경 의존성보다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좌우

- 전체적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의 성과 역량은 대부분 자원과 환경에 비례하여 나타남. 하지만, 투입대비 성과 즉, 효율성 비율에는 자원·환경보다 네트워크 혹은 활동역량에 크게 좌우됨. 강원·충북의 경우 자원·환경 역량이 현저히 낮으나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역량이 높아 성과와 효율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주어진 자원·환경은 당장 바꿀 수 없을 지라도 산학연, 기업·정부간 협력,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역량 즉 노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부문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결과('15년)

지역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경기	4.412	5.417	1.741	2.689	2.885
서울	5.059	2.196	2.083	3.390	3.603
대전	2.989	4.377	1.281	3.367	1.910
경북	1.150	1.383	2.708	1.768	2.453
충남	0.836	1.309	2.771	1.658	1.859
울산	0.344	0.604	2.429	2.684	1.987
광주	0.715	0.569	2.288	2.420	1.661
전북	0.566	0.689	2.463	2.435	1.193
대구	0.561	0.713	2.431	2.150	1.434
인천	0.719	1.363	1.426	2.621	1.022
전남	0.177	1.042	2.726	2.107	0.855
부산	0.709	0.622	2.246	1.718	1.441
제주	0.146	0.385	1.882	2.787	1.404
경남	0.672	1.124	1.780	2.023	1.002
강원	0.352	0.185	2.280	1.532	1.913
충북	0.679	0.835	1.266	1.486	1.546
<b>평균</b>	<b>1.255</b>	<b>1.426</b>	<b>2.113</b>	<b>2.302</b>	<b>1.760</b>

출처 : KISTEP 보도자료 2015. 12. 8. (화).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3가지 시사점

- 첫째,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자원·환경에 좌우되다보니 지역 간 격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남. 둘째, 서울·경기·대전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상당히 높지만, 효율성 지표는 평균에 비슷하거나 낮음. 자원·환경을 바탕으로 활동이나 네트워크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셋째, 지역과학기술혁신 효율성은 자원·환경보다 네트워크 역량 등 지역의 혁신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됨. 이는 현재 과학기술혁신이 지방 수준에서는 지극히 초기 단계임을 보여줌.

☞ 당의 입장 및 대응

- 균형적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3가지의 혁신노력이 요구됨. 첫째, 수도권·대전지역 외 자원·환경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에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둘째, 모든 지역내 혁신주체(지자체, 지역출연기관, 산학)들의 네트워크 혹은 활동 역량 제고 노력. 셋째, 혁신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에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등임.
- 결국, 국가와 지방에 공히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경쟁적인 과학기술혁신, 즉,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요구됨. 구체적 정책적 처방으로, 우선,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허브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부여, 산하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둘째,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대학 지원 확대, 지역인재 육성 및 유출방지, 셋째, 서울·경기·대전과 타 지역 간 혹은 외국 지역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연구에 ‘과학기술역량증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함.

<표> KISTEP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부문 및 항목

부문	항목
자원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활동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기업간·정부간 협력, 국제협력
환경	지원제도, 인프라, 교육/문화
성과	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의 배경과 파장

- 12월 11~12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합의문은 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됨. 12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한 모란봉악단이 예정되었던 공연을 전격 취소하고 북으로 귀국함.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공작(업무) 측면에서 서로 간의 소통 연결에 원인이 있다”라는 보도만 내놓아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억측이 나뉨.
-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에 대해서는 모처럼의 당국회담이 성사되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하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들이 많음. 황부기 남측 수석대표의 브리핑이나 북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남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선언 이후 계속 제안한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포괄적 의제를 제시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연계해 제시함.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연계에 대해 남측은 그 성격이 다른 문제로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는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인해 이번 회담이 아무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말함. 즉 이번 회담의 핵심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이고 이것은 이미 예측된 것이었는데, 회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워낙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음.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혹시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회담 직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8.25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그런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음.

- 남북 당국회담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귀결된데 비해, 모란봉악단의 전격적인 철수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바였기에 많은 사람을 의아하게 했음. 그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리허설을 본 중국측이 김정은 찬양 일색의 노래를 빼라고 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강력히 반발했다고도 하고, 다른 관계자는 중국 측이 공연 관람 인사의 급을 낮추자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함. 아무튼 모란봉악단의 방중 공연은 중국 정부가 초청을 했고 북에서는 권력 서열 5위의 김기남 비서가 배웅하는 등 양측이 상당한 공을 들였고, 이는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훈풍이 불고 있는 북중관계를 더욱 공공히 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토대를 닦는 것으로까지 분석되었기에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음.
- 북한과 중국 체제의 특성으로 보아 신화통신의 보도와 그것을 되풀이 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 이상의 것이 공식적으로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진짜 원인을 확인하기는 힘들. 다만 정황상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그 직전에 있었는데, 당시 중국 외교부가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라고 우회적이지만 공식적으로 김정은 발언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것과 모란봉악단과 관련한 중국측의 모종의 조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고 추측할 수 있음. 북측으로서는 이른바 최고 존엄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공연 관람의 격을 낮추거나 그 내용에 시비를 걸자 중국에 대해 결코 굽힐 수 없다는 자존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했을 수 있음.
- 모란봉악단 전격 철수가 이후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은 될 수 있으면 수습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진단함.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14일 사설에서 "모란봉악단의 전격적인 철수가 중-조 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진단에 힘을 실어줌.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배경이 결국 수소폭탄 발언 등 북한 측의 핵능력의 지속적인 증강과 이를 업은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체결 관련 외교적 공세 대 중국 측의 6자회담 조속 재개와 이를 위한 북한의 대외적 핵능력 과시 자제에 대한 요구가 충돌한 것이라면 북중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 ☞ 당의 입장 및 대응

- 8.25합의에서의 당국회담 개최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리지 않던 회담이 모처럼 재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크게 실망스러운 일로서 남북 당국 모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특히 남한 당국은 그 동안 수차례 당국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막상 만나서 상대의 핵심 요구는 아예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결국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며 얼굴만 붉히고 끝낼 거면 회담은 왜 제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산가족 상봉은 꼭 해야 하고, 또 정례화해야 하며 상시적 상봉이 실현되기 전에 생사 여부의 전면 확인도 필요함. 하지만 북으로서는 그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그런 북한을 설득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함.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가 금강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의 수시 정례화를 위해서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더 자주 더 넓게 열려야 함. 즉 금강산관광은 재개해야 하며, 김왕자씨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북측의 공식적인 담보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면 될 일임. 그러나 우리 당국은 미국의 반대,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재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북으로의 현금 유입과 그것의 활용을 통한 북의 핵개발 등 보수층의 오래된 부정적 입장과 논리를 이 정부가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심한 일임. 금강산관광이 북의 1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지만, 금강산관광이 중지된 이후에도 북은 2,3차 핵실험을 강행함. 북은 노동자들의 인력수출 및 중국에 대한 지하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 즉 금강산관광 지속과 북의 핵능력 증강 정책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금강산관광을 계속 중지한다고 해서 북의 핵실험이나 핵능력 증강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임. 이제 금강산관광은 말 그대로 남북 교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판단할 일임. 더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금강산관광을 계속 막을 이유가 없음. 더구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확대의 지렛대가 되는 데야 말할 나위 없음.

- 북한 당국도 지난 당 창건기념일 당시 김정은 제1비서가 핵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고 ‘인민 제일’을 내세웠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남한 및 주변국에서 “북이 핵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동결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제 6자회담 등 대화를 재개할 때이다”는 판단이 대세로 자리 잡게끔 해야 함.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세를 펼 수 있지만, ‘선비핵화’ 주장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듯이, ‘선평화협정’ 주장도 남한과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할 수 없음.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2.29합의와 유사한 동결과 보상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푸는 계기를 만들고, 비핵화 논의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 평화회담(한반도평화포럼 등)을 병행해가자는 데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대화공세를 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서도 남북대립은 고착화되고, 북핵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한반도비핵화의 가능성은 점점 닫혀가고 안보불안은 심화되는, ‘말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 대해 낙담하고 정권교체 전에는 당분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거나 그냥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려는 사람들도 있음. 그러나 이런 현상에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국, 특히 국내정치를 우선하며 이런 상황의 지속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방기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임.

## 4. 정치

###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 새누리당의 기득권 버티기로 선거구 미확정 지속

- 12월 15일(화)이 20대 총선 예비후부 등록일. 그러나 이 때까지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통해 선거구 확정안 타결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음. 그러나 새누리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결사 거부로 협상 실패.
- 국회의장이 선거구 확정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12월 15일(화)~16일(수) 이틀간에 걸친 장시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에 의한 선거구 확정은 요원한 상황.
-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언급, 12월 말까지 선거구 확정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틀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선거구 확정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예고.
- 국회의장의 선거구 확정 직권상정은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상황에서도 정치관계법 처리와 관련 여야의 합의에 의한 처리가 오래된 정치 문화였음.
-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음. 자당 소속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제시한 지역구 의석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기반으로 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를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4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축소안마저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정치행태는 극단적인 기득권에 매몰된 적나라한 새누리당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정치행태는 ‘의회 과반 의석이 무너진 다’는 사회 여론이 통하는 의회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보신주의적 판단에 따른 것임.
-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사표방지와 사회적 약자, 다원성의 정당정치를 역행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불성 사나운 행태는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치’의 권위적, 독단적 정치행태를 더욱 강화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 될 것임. 그리고 그 정치적 후과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임.

### ○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안철수 의원이 12월 13일(일)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음. 일부 여론조사에서 제3당으로 올라서고 수도권에서 3자 경쟁구도 형성의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분열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야권은 ‘3자 필패’의 부정적 결과만 예상.
-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는 부정적임. 먼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 범위에만 작동.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판단.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한다고 하는 의원도 다섯 손가락이 남아 돌 정도로 그 수가 미미함.
- 비당권과 의원들도 정작 안철수 의원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는데 등을 떠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탈당에 주저하며 문재인 대표 사퇴 카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결과적으로 야권 분열이라는 부정적 효과 어떻게 방어하며 본인 스스로의 입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임. 시기적으로 야권이 집권여당에 대응하여 선거구 획정, 노동법 개악 등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홍을 겪는 것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임. 이를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돌파해느냐가 관건임.
- 또한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독자 정치 행보와 영향은 2~3주 정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동정적인 반면, 안철수 의원에게는 관망의 시각이 지배적임.

- 특히 국민적 시각에서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도 신당 만들기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신당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존재. 창당의 정치 행위에 비해 탈당의 정치 행위는 지극히 미미한 사건에 불과함.

## ☞ 당의 입장과 대응

- 당은 제도적 유불리와 단기적 이해를 넘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무지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빌미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 이는 의회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이자, 폭거임.
- 당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을 천명한 바 있음. 이를 향후 대응방향에 기본으로 하여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연동형 도입없이 '지역구 7석 증가, 비례대표 7석 감소'를 마치 기정사실인양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당의 가용 자원과 실천력, 메시지 기획력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비판, 압박해야 할 것임.

## 5. 여론동향

### I. 해외 여론동향

#### ○ 미국 여론동향

##### ▶ 대선 여론조사서 선두 차지한 이민자 출신 테드 크루즈

- 지역 언론 디모인 레지스터가 블룸버그와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여론조사 때보다 21%p 뛰어 오르며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함.
- 8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12/7~12/10)에서 크루즈는 31%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21%)와 벤 카슨(13%) 순으로 나타남.
- 크루즈 의원은 지난 10월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21%p 오른 반면 지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카슨은 28%에서 13%로 추락함.
- 이번 여론조사의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도 크루즈는 트럼프를 크게 앞지름. 크루즈를 첫번째(31%)와 두번째(20%)로 택한 그룹을 합치면 51%에 달하지만, 트럼프를 뽑은 그룹은 첫번째(21%)와 두번째(14%)를 합해도 35%에 그침.
- 정치 분석가들은 크루즈의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로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의원은 지난 TV토론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명확히 내며, 그의 뛰어난 토론 실력과 보수적 색깔이 지지율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지목함.



## ▶ 미국인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테러리즘 지목

-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파리 연쇄테러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장애인 복지시설 테러 이후 미국인들은 테러리즘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갤럽 여론조사(지난 2~6일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4%) 결과, 미국인의 16%는 테러가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함. 이 같은 조사는 2001년 발생한 약 3000명의 사망자를 낸 9·11 직후 나타난 응답률(46%)보다는 낮지만 지난 10년간 이뤄진 조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인식은 지난해 11월에 조사에서 미국인의 3%만이 2014년 11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만이 테러가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13%는 정부를, 9%는 경제가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함.

## ▶ 미‘지상군 투입’ 여론 점점 늘어나

- 미국 국민들 사이에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 요구가 점점 높아지며, 국가안보와 테러 정책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급증함.
- AP통신과 시장조사기관 GFK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3~7일, 표본 오차 ±3.4%포인트)에 따르면 IS를 격퇴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응답률인 31%에서 42%로 상승함. 또 IS에 대한 미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46%에서 56%로 높아짐.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응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60%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IS와의 전쟁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여론도 68%로 나타남.
- 이날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NBC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최우

선 국정과제로 ‘국가안보와 테러’를 꼽았는데, 이는 4월에 있었던 같은 조사(2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특히 응답자의 29%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테러 위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9·11 테러 직후에도 이 수치는 2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론의 변화가 프랑스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테러 이후 IS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고,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의 느슨한 공습과 외교적 해법 모색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해석함.

### ○ 영국 국민들의 절반, ‘EU탈퇴’찬성

-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ICM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탈퇴’와 ‘EU잔류’에 응답자 비율이 정확히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최근 들어 영국의 EU탈퇴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민자들의 영국 내 취직과 거주를 허용하는 현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EU탈퇴’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음.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27개국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뒤 협상 결과를 가지고 2017년까지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벌일 예정임.
- 한편, 영국의 EU탈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영국의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영국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는 경제 보고서를 공개하며,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발생할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서 불거질 불확실성을 언급함.
- 향후, 영국이 EU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들을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됨.

### ○ 페루 대선 여론조사, 케이코 후지모리 지지율 압도적 1위

- 내년 4월 대선이 개최되는 페루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40)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대선 승리가

예측되는 상황임.

- 13일(현지 시간) 입소스는 18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우파 정당 '인민세력당(Fuerza Popular)'의 대표 후지모리가 33%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지난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후지모리는 지지율 2위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재정장관(16%)과 두 배 이상 격차를 내며 선두를 지키고 있음.
- 내년 4월 페루 대선에서 후지모리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게 될 경우 6월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됨.

## II. 국내 여론동향

### ○ 엇갈리는 안철수 지지도, 호남서도 간보나...

#### ▶ 안철수 탈당, 잘한 결정 43.9% vs. 잘못된 결정 36%

- 국민의 40% 이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선택에 대해 '잘한 결정'으로 평가함.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호남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타남.
-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종합편성채널 'JTBC' 의뢰로 실시한 '안철수 탈당' 민심 조사(14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1\%$ ) 결과, 응답자의 43.9%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함.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35.7%에 그침.
- 지지정당과 지역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결정 53.4% vs 잘못된 결정 28.8%)을 비롯해 △무당층(48.1% vs 35.2%) △수도권(46.8% vs 35.3%)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29.7% vs 45.7%) △광주·전라(34.7% vs 47.2%)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처럼, 야권 지지층과 호남에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안 의원의 독자 행보가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로 전략할지 주목됨.
-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야권 지지층과 호남 민심의 비토 여론과 관련해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에 의한 것도 포함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잘한 결정’ 의견 전부를 안 의원에 대한 지지로 등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호남여론,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안철수 신당’**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은 제3당이 될 가능성을 보임.
-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14일 조사, 표본오차 ±3.5%p, 신뢰수준 95%)에서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호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찍겠다는 비율이 27%인 반면 30.4%가 안철수 신당을 찍겠다고 응답함. 또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남.
- 중앙일보 측은 "안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직후에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호남의 반(反) '문재인 대표' 성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 하지만,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타남.

▶ **야권 텃밭 광주/전라, 안철수 신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 머니투데이 the300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안철수 신당'이 등장 할 경우에 정당지지도를 조사(14,15조사, 신뢰수준95%, 표본오차 ±3%p)한 결과,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6.7%로 새누리당(37.6%), 새정치민주연합(2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어 정의당이 5.9%,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1.6%, 기타 정당 3.8% 순으로 나타남.
- 참고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최대 20~25%정도의 지지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 16% 정도의 지지도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임. 서울에서는 '

안철수 신당'이 23%로 새정치민주연합(23.5%)과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나타남.

- 하지만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32.1%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안철수 신당'은 이보다 10%p 가량 낮은 22.2%에 그침.
- 야권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대에서 '안철수 신당'은 새누리당을 뛰어넘는 큰 파괴력을 보이진 못함.
-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로부터는 17.1%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지만, 이에 비해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 29.1%의 지지율을 기록해 새누리당(6.0%)이나 새정치민주연합(20.0%)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음.
- 스스로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새정치민주연합(33.1%)보다 10%p 이상 낮은 19.4%에 머물렀고, 이는 새누리당(23.9%)보다도 낮은 수치임.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로부터는 정의당(16.2%)보다 높은 21.5%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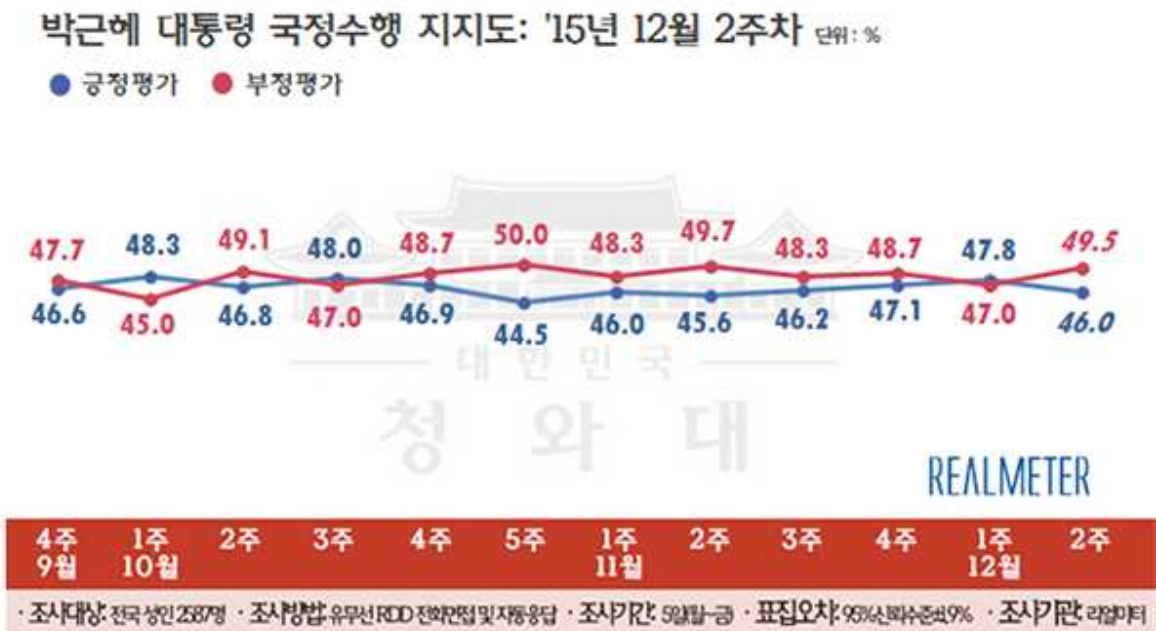
#### ○ 직권상정 여론조사, 찬성 41.9% vs. 반대 46%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만큼 정의화 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결과, '경제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9%로 나타남. 반면 과장된 해석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응답자는 46%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임.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함.

○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4.2%(▼1.8%p), 부정 50.3%(▲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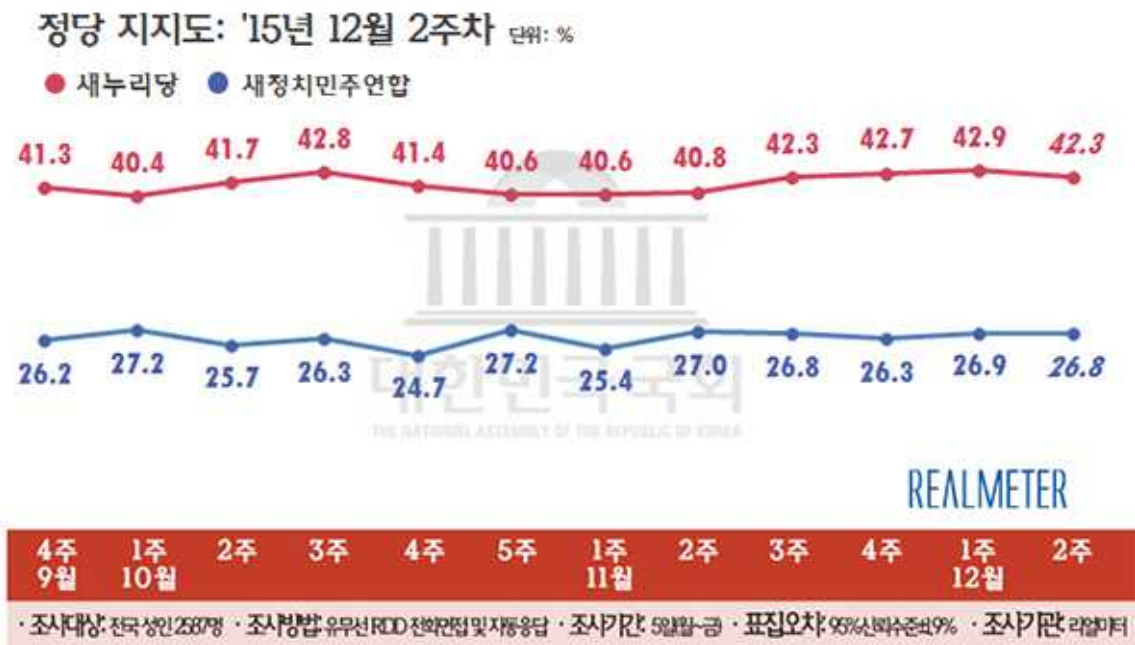
- 리얼미터가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주중집계(14~16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에서 12월 2주차 여론조사(7~11일) 결과대비 1.8%p 하락한 44.2%(매우 좋음 14.3%, 잘하는 편 29.9%),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50.3%(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17.0%)로 집계됨.



-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기·인천(▼4.2%p)과 대구·경북(▼8.3%p), 50대(▼5.3%p)와 60대(▼3.8%p), 새누리당 지지층(▼3.6%p), 보수층(▼2.2%p)과 중도층(▼3.4%p)에서 주로 하락했는데, 이는 노동,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 요청’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정당지지도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2월 3주차 주중집계((14~16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에서 새누리당은 40.6%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7%p 하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6%p 상승한 29.4%를 기록함.
- 정의당은 11월 4주차부터 12월 2주차까지 3주 연속 6%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12월 3주차엔 1.3%p 하락한 5.3%로 집계됨.
- 모든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후폭풍으로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거나 상승했는데, 새누리당은 경기·인천(▼5.8%p)과 대전·충청·세종(▼8.3%p), 40대(▼3.4%p), 50대(▼4.7%p)와 60대(▼3.4%p), 중도층(▼4.1%p)에서 주로 내린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2.4%p), 경기·인천(▲6.2%p)과 광주·전라(▲4.7%p), 20대(▲6.0%p), 40대(▲3.3%p)와 50대(▲3.5%p), 보수층(▲2.8%p), 중도층(▲3.2%p), 진보층(▲1.9%p) 등 거의 모든 지역이나 계층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남.



출처: 리얼미터